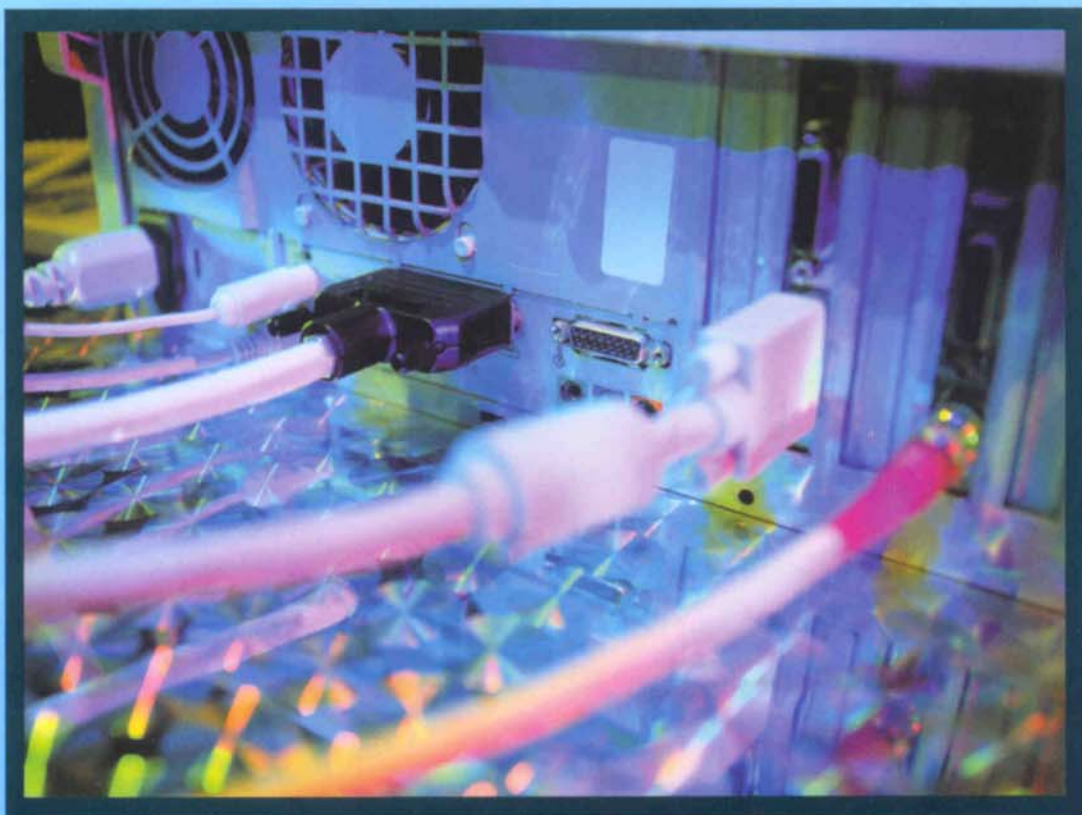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2월 / 제14권 제2호 (통권 142호)



2003. **2**

CONTENTS

- 2 • 산학칼럼 / 지방분권, 반드시 해내야 한다 4 • 경영 · 기술정보 / 전자협관행 횡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스템 - PenSion Plus
- 9 • 이 달의 쟁점 /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하여 12 • 제153차 월례세미나 / 대구발전의 역동성 회복: 방향과 전략
- 20 • 대덕단상 / 지식재산권 제도의 폐해 - 변리사로서의 작은 경험 23 • 만나봅시다 / 장욱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 27 • 연구원소식 28 • 회원동정 30 • 신착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지방분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최만기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장·본원 원장

60년대부터 추진된 중앙정부 주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심화시키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인구의 경우 95년에 수도권이 전국의 45.2%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46.3%로 늘어났으며, 지역총생산의 경우 수도권의 비중이 95년의 45.7%에서 99년 46.3%로 늘어났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은행예금과 대출액 및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도 64.3%에서 70.9%로 급격히 증대되었다. IMF 이후 경제력 회복에서도 97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0년 수도권은 153.9인 반면 지방은 71.4에 불과하였다.

특히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두 바퀴인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중앙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지방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날로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 중앙과 지방간 격차의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에 의해 선출하는 형식적 지방자치제를 넘어 실질적인 분권체제를 필요로 한다. 지역간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의 지방분산,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내실화가 삼위일체되어야 한다. 이는 권력과 기회의 공간적·기능적 분산과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력과 기회의 분산이란 지역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지자체로 분산시켜나감을 의미한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제란 지자체의 권능을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인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내실있는 내생적 지방자치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분산적 분권, 특화적 분권, 자치적 분권, 협동적 분권 및 공생적 분권이 총체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행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임기내 추진할 10대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수행을 천명하였다.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정수도의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육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은 앞서 언급한대로 내생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내생적 분권은 지역혁신을 통하여 도모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의식, 지역의 교육, 지역의 문화, 지역정치 등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분권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자체 혁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에 관한 결정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기관위임사무 중심의 권한이양은 집행권만 지방에 내어주고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중앙집권체제의 새로운 행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원을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는 재정개혁을 이룸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분권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는 지방분권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인재활당제 등의 조치도 선결과제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리 속에서 지워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이 중앙과 지방이 없다. 한국의 수도권처럼 모든 것이 집중된 중앙으로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뮌헨은 경제,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거점공항, 함부르크는 무역과 항만,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교육의 수도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임기내 추진할 10대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수행을 천명하였다.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실행정수도의 건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육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은 앞서 언급한대로 내생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내생적

분권은 지역혁신을 통하여 도모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의식, 지역의 교육, 지역의 문화, 지역정치 등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분권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자체 혁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민들의 의식과 문화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화와 의식의 혁신은 다른 혁신의 기초가 되고 다른 혁신을 촉발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다.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신뢰, 동반자적 협력정신, 창조적 파괴를 수용하려는 의지 등의 사회의식문화의 혁신은 여타 혁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창의성, 개방성 및 민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혁신이 요망된다. 셋째,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분권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인 가치관과 용기를 가진 주체들로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닌 연합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지역을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이를 절감하고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포스코의 지원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운동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 포럼을 통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심도깊은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처방들은 매일경제신문에 연중 지상포럼으로 심화시키고자 한다. 아무쪼록 지역민과 본원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이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한다. 

전자칠판형 첨단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시스템 - PenSlon Plus



신순희 | (주)모든넷 대표이사

1. 서론

교수매체(Instructional media)는 교수활동에 필요한 일련의 사항을 학습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수자, 교재, 칠판 등으로 학습환경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교수매체에 컴퓨터가 개입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컴퓨터를 교육적인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 즉, 교사가 앞으로 교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업방식을 펼치는 것은 흥미 있는 새로운 학습 원리임에 틀림없다.

분산된 시각과 청각을 판서 기능을 활용하여 청각적 자극을 시각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분산된 집중력을 응집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자칠판은 멀티미디어 학습 중 교수자가 자신의 모니터 위에 판서를 하면, 그 화면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강의 환경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시각이 극대화 되도록 짜여진 멀티미디어 교재 위에 교수자의 청각적 학습이 더해질 때, 그 청각자극을 동시에 시각화하여 화면에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청각적 자극을 화면에 수렴함으로써 분산된 집중력을 응집시켜주는 반면 판서가 가능함으로써 집중된 시선을 핵심 학습내용으로 쓸 수 있어 학습 및 기억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란에서는 이러한 교수활동 중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형 전자칠판의 원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PenSlon Plu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PenSlon Plus (펜스론 플러스)

모니터형 전자칠판인 PenSlon Plus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편리한 설계로 단순히 디스플레이된 아이콘을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전자칠판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칠판을 구현함에 있어 기존처럼 컴퓨터 화면을 가리지 않고,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대부분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펜과



〈그림1〉 PenSlon Plus의 실제 모습

손가락 등의 터치로 마우스 기능을 대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PenSlon Plus는 강의내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e-Education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편한 Tool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Contents 제작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멀티배경칠판(교재화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LCD Projector, Projection TV 등을 이용한 완벽한 칠판 없는 강의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기업 내 회의 및 세미나, 브리핑시 주의 집중 및 효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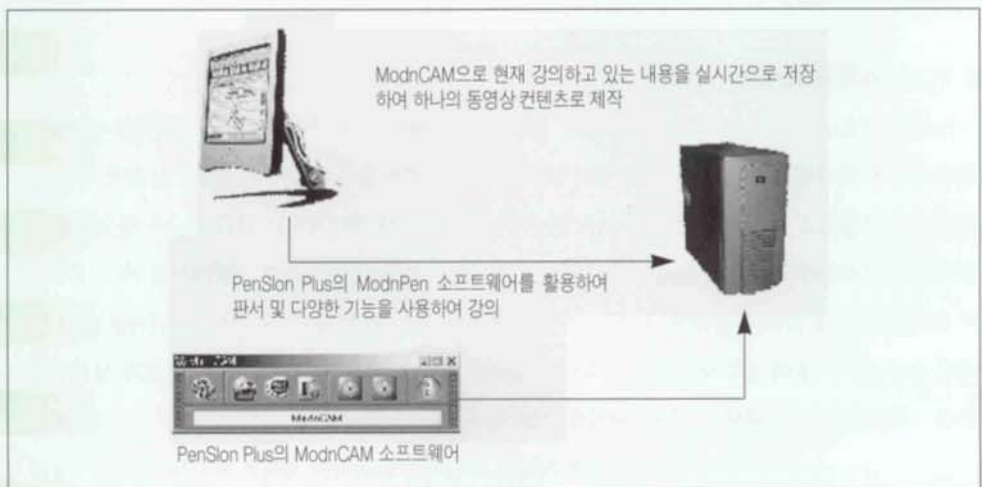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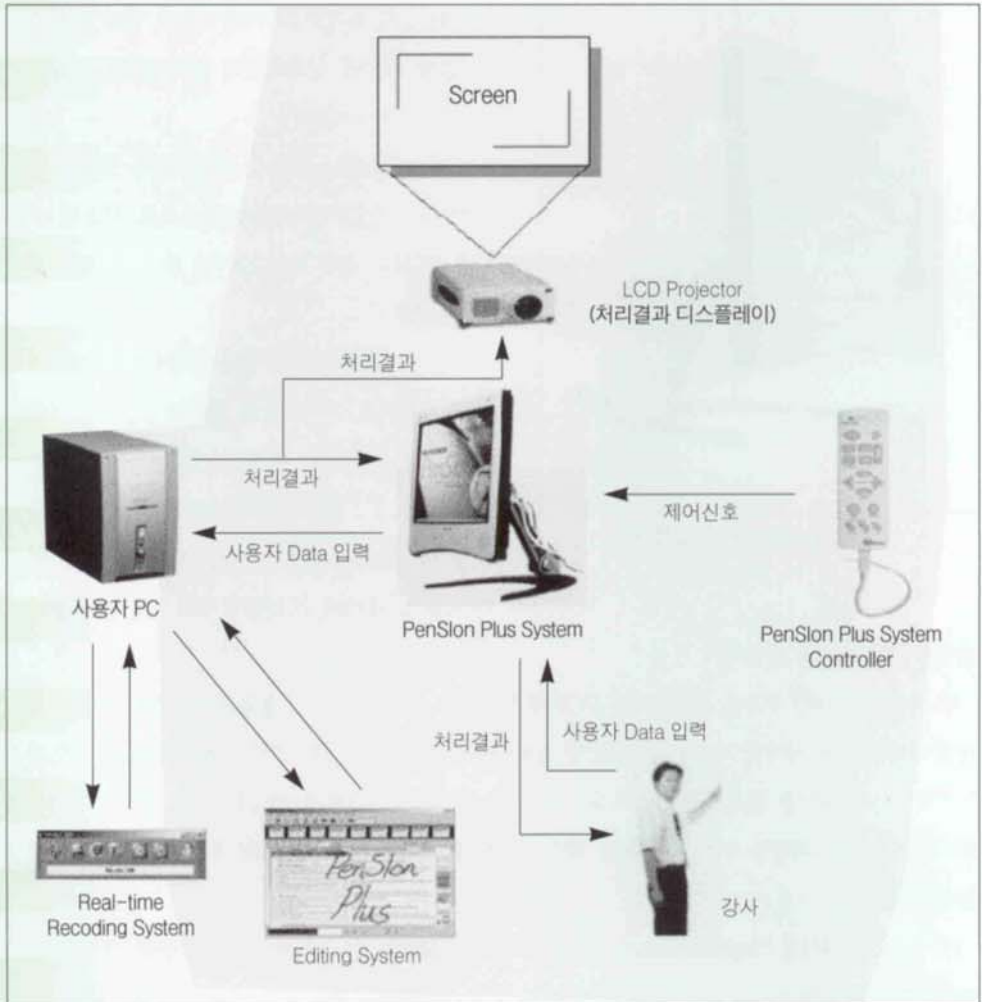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몇 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PC카메라로 찍고 있는 강사의 모습을 PIP 기능으로 모니터에 구현하였으며, 제작된 각종 Contents 및 강의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펜슬론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의시 판서화면을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판서 내용을 윈터치로 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PenSlon Plus를 이용하여 원격 영상회의 및 교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어학실의 경우 모니터 공유기를 이용한 강의 시스템을 구현할 수도 있다.

3. PenSlon Plus System 구성도

PenSlon Plus System은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아래의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면상의 내용이 교수활동 모습과 함께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저장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존의 강의 테이프와는 달리 교수자의 교수활동 모습과 프리젠테이션 화면의 판서 모습이 동시에 저장됨으로써 학생은 원격 수업에서도 마치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서 포인트를 연필로 글자를 쓰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교수자의 활동이 화면에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저장된 강의는 VOD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웹기반학습(Web Based Instruction)으로 활용될 때, 인지적 영역의 학습이나 어휘적인 지식을 학습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2〉 PenSion Plus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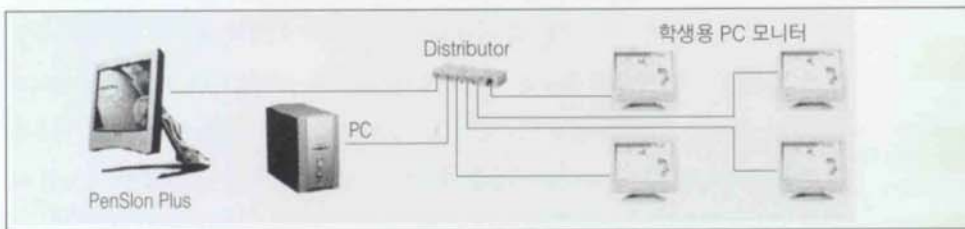
4. PenSion Plus를 활용한 시스템 구성

다양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전천후 멀티미디어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현하고 있다.

- LCD Projector 와 전동 스크린을 이용한 강의, 세미나,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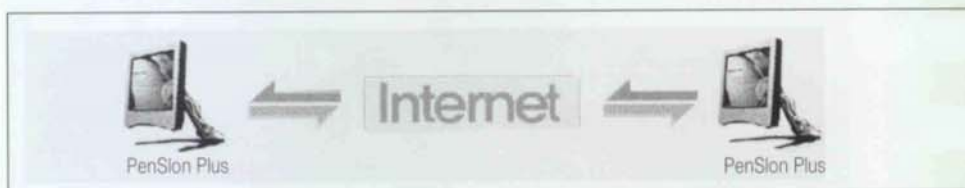


- 모니터 분배기를 이용한 강의 (LCD Projector 나 전동 스크린 없이 칠판 강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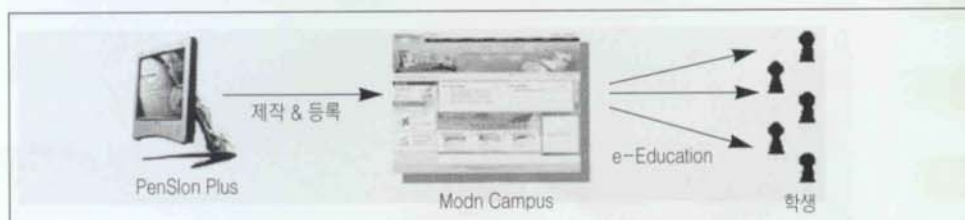


- 다양한 공유 프로그램(예넷미팅(NetMeeting))의 문서 공유 기능 이용

- 공유된 문서상의 판서 내용이 똑같이 전달되게 된다.



- 사이버 강의용 사이트(www.modncampus.co.kr)를 활용한 e-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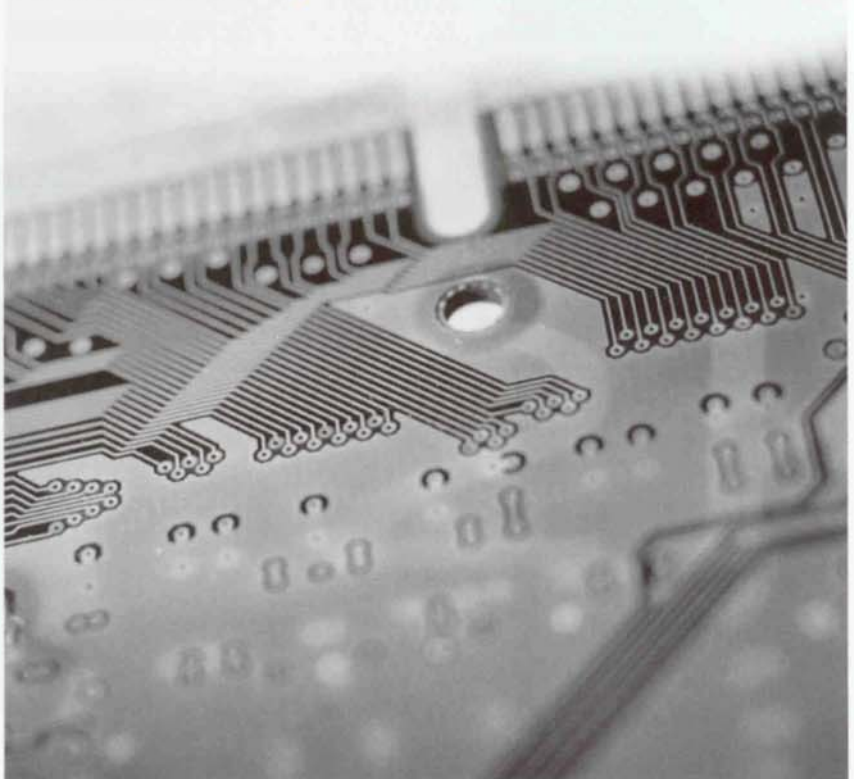


5. PenSlon Plus의 실제 적용 분야

-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의 강의 및 세미나실
- 관공서, 단체, 기업 등의 회의실이나 강의실
- 호텔, 수련원, 연수원 등 (주요 공개 강좌, 세미나, 영상회의 및 원격교육 시스템)

6. 결론

교육환경에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매체가 가지는 교수활동에 대한 영향력은 인쇄술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대변혁으로 자리잡았다. 현대에 이르러 컴퓨터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학교 수업에서 통합되고 교수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학습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적 자극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자료의 시각화를 통한 교재 제시는 교수·학습의 효율을 신장하였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학습에 있어서의 PenSlon Plus는 기존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간단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상용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멀티미디어 강의를 이루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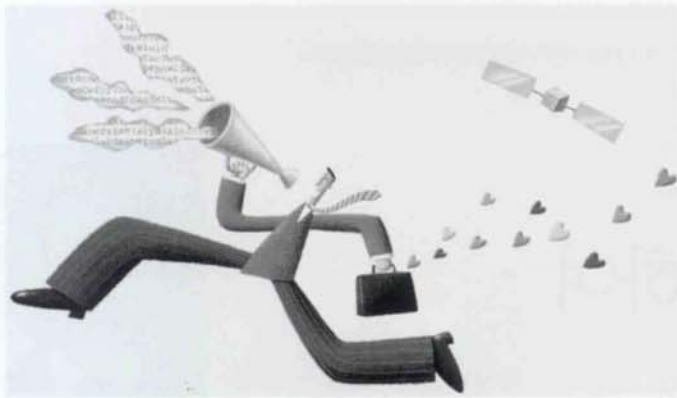


최 봉 태 | 상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금까지의 노사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사용자 및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높다. 노사정책은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책보다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정책 공약을 검토해 본 후 향후 예상이 되는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중 노동시간부분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일제와 관련하여 '선 실시 후보안'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임기 중 전체 사업장에 실시한다는 것이고 법정 일정에 앞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게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인건비 등 증가되는 임금비용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되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원론적 접근보다 적극적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임금손실부분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고, 정부 추진의 주 5일제 입법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지가 공약실천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비정규노동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문제는 균등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지나친 남용을 제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하며 비정규직과 여성, 저학력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직이나 계약직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계약서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해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임시직이나 계약직 노동자와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균등대우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채용시 서면 근로 계약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상시 고용하는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해서 행정감독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회창 후보와 공약이 일치한다.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의 유동화와 정규직 노동자의 직장 보호를 위한 안전판이라는 인식이 있고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의 역관계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면계약화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지 의문이다. 아울러 행정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도 그 동안 노동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더라도 비정규직의 보호 계획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노사간에 합의하



고 그에 따라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인하되 그 외의 영역에서는 법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 발본색원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는 기간제 고용법제를 우리 법제가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려는 사용자측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법 정신에 어긋나는 파견의 형태는 상용형 파견으로 전환하며 용역이나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을 방지할 감독체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단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인권유린과 불법채류를 양산하는 만큼 폐지를 주장하며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취업자로 인정을 하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밝혔다. 고용허가는 최장 5년으로 하는 견해이다. 외국인력관리는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비리의 소지를 없애는가 하면, 직업알선, 교육 등의 사업은 공공직업 알선 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외국인력 도입 규모나 도입허용 업종과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부에 가칭 '외국인력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채류자 강제출국조치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새 제도를 도입, 심사를 거친 후 적합한 인력에게는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부적격자만 출국조치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정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도 정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일단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문제 이외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의 국제화는 시대의 대세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잘못된 노동정책을 쓸 경우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 생산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훼손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수준에 맞는 외국인 고용정책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서 파생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만 맡기는 무책임한 일은 없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는 인정하지만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과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며 노조의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고 노조중앙의 리더십과 대표성, 집권화된 통제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지역, 산업별 하부 노사정 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잘못된 노동정책을 쓸 경우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우리 나라 및 우리 나라 생산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훼손시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수준에 맞는 외국인 고용정책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에서 파생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만 맡기는 무책임한 일은 없도록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회를 설치하여 노사정위에 걸린 과부하를 감소하고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정 위원회를 상설적 협의기구로 위상을 확립하고 인사와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대리참석을 제한하며, 집행감독권을 확보하고 대통령 보고방안 마련 등의 장치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쟁점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노사정 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용안정과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금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월차 및 생리휴가의 보장등과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법 일부 조항에서 보듯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나 특별한 보호를 국가가 개입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 동안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정권을 막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하에서 노조활동 자체를 공안적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하다고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가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정권과 관료들의

공기업 경영진 인사, 무원칙적이며 잦은 경영개입을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라는 판단에 따라 공기업 개혁을 위한 지배구조의 정상화는 민영화를 통해서가 아닌 정권의 낙하산 인사중단과 관료들의 간섭을 차단하고 경영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 정부는 공기업을 국가적 간판 기업으로 키우는 동시에 남북연결, 동북아 개발에 따르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며,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철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간단히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요약 중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신문기사에 실린 보도대로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노동과 서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가 슬슬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본인 스스로의 말과 같이 노동정책의 대상이란 이해가 대립되는 두 당사자 간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실의 문제이고 조그마한 변화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의 환경에서는 인력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노사정책의 성패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우선, 노사간에 합의되어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노사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기존의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을 한다는 신뢰를 쌓아가길 바란다. 



대구발전의 역동성 회복 : 방향과 전략



조해녕 | 대구광역시장



편집자 주 : 지난 2003년 1월 20일(월) 대구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개최된 본원 「제153차 월례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대구발전의 역동성 회복 : 방향과 전략

SEMINAR

I. 머리말

□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 디지털사회, 지방화·세계화사회로 표현되고 있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식과 디지털 기술이 그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가 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전세계가 경쟁상대가 되면서 동시에 경쟁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역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종래 한 지역의 발전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책임자가 되었으며,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의 발전 내지 회복일 것임.

□ 우리 대구도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지역경제의 회복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저도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제1의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대구는 그 동안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민선 1, 2기 동안 이의 회복을 위해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성서산업단지 조성,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II. 대구 경제의 현황

1. 지표상으로 본 최근 지역경기

□ 최근 지역경제는 작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와 섬유류,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수출(11월 : 8.7%) 및 산업생산(11월 : 2.4%)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

가와 실업률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수출은 직물수출의 회복과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중국, 터키 등에 대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기계류의 호조로 5월 이후(9월 수출감소는 일시적 요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산업생산은 구조조정 및 소량생산체제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섬유업으로 인해 증가세가 수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자동차부품 및 1차금속 등의 호조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대구 지역은 실물경기 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여건의 악화, 가계대출 부실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적 지표는 악화되고 있음.
-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02.2/4)118→(3/4)115
→4/4(102)→(03.1/4)8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단위 : %)

	'00년	'01년	'02.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3.7	-7.2	0.8	-2.3	-7.7	7.7	2.4
수출*	6.3	-14.6	19.0	11.7	-2.6	28.4	8.7
물가상승률*	2.1	3.8	1.4	1.9	2.7	2.8	3.4
실업률	4.6	4.5	3.9	3.9	3.3	3.5	3.6
어음부도율	0.61	0.50	0.39	0.30	0.43	0.37	0.34
선행종합지수 전월비	-	-	-0.2	-0.7	0.4	-	-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	-	-0.3	0.5	-0.5	-0.6	-

주 : *은 전년동기비

2 대구 경제의 현황

▷ 소득·소비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GRDP, 산업생산, 수출은 매우 취약함.

□ 소득·소비 수준

- 대구시민의 소득, 소비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

- 대구 지역의 소득세 납부수준, 지출 및 저축수준 등 현재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볼 때 대구시민의 소득·소비는 전국 시·도중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보임.
- 소득세 납부수준(3~5위), 지출수준(5위), 저축수준(5위)
- 소득세 납부수준 : 대구의 소득세 징수실적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표수준 등은 16개시도중 상위수준(3~5위)임.

〈7대도시 1인당 소득세 납부금액〉 (단위: 천원)

	전국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9년	333	243(3)	908(1)	243(3)	147(11)	214(5)	195(7)	265(2)
'00년	365	233(5)	972(1)	251(3)	187(10)	219(6)	237(4)	337(2)

※ 주 : ()는 시도 순위, 1인당 소득세 납부금액(시도별 소득세 징수금액/주민등록 인구)
 ※ 자료 : 국세통계연보, 지역통계연보

- 지출 수준 : 대구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인천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으로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대도시 1인당 민간소비지출〉 (단위: 천원)

	전국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0년	6,309.2	6,275.1(3)	7,268.8(1)	6,507.7(2)	6,115.7(6)	5,872.5(11)	6,123.5(4)	5,904.7(10)
'01년	6,974.5	6,879.2(5)	7,887.4(1)	7,289.8(2)	6,906.2(4)	6,603.3(7)	6,816.8(6)	6,925.7(3)

※ 주 : ()는 16개 시도중 순위
 ※ 자료 : 통계청, 2000년, 2001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 저축 수준 : 지역의 1인당 금융기관의 예금('00년)은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 제주, 대전, 부산에 이어 5위 수준(중상위권).

〈7대도시 1인당 금융기관예금〉 (단위: 천원)

	전국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9년	19,628	13,012(6)	50,380(1)	14,125(4)	9,914(13)	13,850(5)	14,941(3)	9,993(12)
'00년	19,387	13,664(5)	47,511(1)	14,404(4)	10,490(15)	13,651(6)	14,602(3)	10,800(11)

※ 주 : ()는 16개 시도중 순위, 금융기관은 예금은행+비통화금융기관
 ※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 대구의 GRDP 현황
- 대구의 GRDP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도시별 GRDP 규모〉

구 분	전국	대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8년	GRDP(10억원)	422,709.0	14,909.2(11)	94,695.1(1)	27,225.0(5)	19,738.4(8)	9,229.1(15)	9,829.5(14)	21,225.1(7)
	1인당(천원)	9,147.3	5,907.4(16)	9,336.6(8)	7,113.1(14)	7,995.5(9)	6,928.9(15)	7,166.2(13)	20,358.9(1)
'99년	GRDP(10억원)	470,356.5	16,271.5(11)	102,460.4(1)	29,365.9(5)	20,937.3(9)	10,350.3(15)	10,720.5(14)	24,156.7(7)
	1인당(천원)	10,040.5	6,414.1(16)	10,180.6(8)	7,694.4(13)	8,327.7(11)	7,664.3(14)	7,663.2(15)	22,710.8(1)
'00년	GRDP(10억원)	503,451.9	17,120.4(11)	108,523.8(1)	30,292.1(5)	22,282.5(9)	11,250.3(15)	11,524.5(14)	25,337.6(7)
	1인당(천원)	10,649.5	6,717.6(16)	10,872.3(8)	7,962.1(15)	8,706.1(11)	8,221.9(13)	8,082.6(14)	23,355.0(1)
'01년	GRDP(10억원)	503,451.9	18,479.2(11)	114,153.1(1)	32,759.4(5)	25,517.7(9)	12,335.6(15)	12,730.5(14)	27,218.1(6)
	GRDP성장률(%)	4.3	3.6	1.9	9.0	2.8	3.2	6.3	0.0
	1인당(천원)	11,288.7	7,288.1(16)	11,347.0(8)	8,813.8(15)	9,979.0(9)	8,820.0(14)	8,967.3(13)	26,006.5(1)

※ 주 : ()는 16개 시도중 순위
 ※ 자료 : 통계청

SEMINAR

- GRDP 규모 : 전국의 11번째
- GRDP 성장률 : 전국의 8번째
- 1인당 GRDP : 전국의 16번째(최하위)

지하고 있어 제조업의 담보상태를 반영함.

〈산업생산지수 추이〉

월	'02.5	'02.6	'02.7	'02.8	'02.9	'02.10	'02.11
지수	103.5	94.4	88.1	85.2	87.5	99.9	96.3
전년동월비(%)	6.2	-0.2	0.8	-2.3	-7.7	7.7	2.4

□ 산업생산 및 수출 수준

▷ 산업생산 및 수출은 전년대비 약간 증가세에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 경제의 위축을 반영하고 있음.

- 수출도 전년대비 최근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 감소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 산업생산은 최근 전년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산업생산지수(2000년 100 기준)가 100 내외를 유

〈수출액 추이〉

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액(만불)	360,922	362,623	314,205	311,070	284,935	243,245

III. 대구 위기의 원인

1.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경제의 상대적 위축

- IMF를 겪으면서 외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수도권 집중 현황〉

구 분	전국(A)		수도권(B)		집중도(B/A)		
	'95년	2000년	'95년	2000년	'95년	2000년	
면적(㎢)	99,268.38	99,460.74	11,675.33	11,705.24	11.8	11.8	
인구(천명)	45,093	47,008	20,414	21,747	45.3	46.3	
소득세 징수(10억원)	14,868	17,509	9,847	12,554	66.2	71.7	
GRDP (10억원)	357,722	503,452	163,441	237,709	45.7	47.2	
제조업	업 체 수(개)	96,202	98,110	53,462	55,874	55.6	57.0
	종 사 자(천명)	2,952	2,653	1,379	1,235	46.7	46.6
	생 산 액(10억원)	364,821	564,834	151,452	214,929	41.5	38.1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비(10억원)	9,441	13,849	4,922	8,442	52.1	60.8
	연구인력(명)	128,315	237,232	71,761	134,827	55.9	56.8
	연구개발조직(개)	2,961	5,227	1,759	3,264	59.4	62.4
금 용	예 금(10억원)	154,136.1	404,660.9	99,803.4	275,394.1	64.8	68.1
	대 출(10억원)	152,477.3	310,804.1	90,494.7	202,796.7	59.3	65.2
대 학 교(개)	131	161	55	66	42.0	41.0	
의 료 기 관(개)	33,377	42,082	15,489	19,471	46.4	46.3	

※ 주 : 1) '95년 소득세 징수실적은 '97년 자료
2) 대학교는 일반대학 현황

※ 자료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KOSIS」,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지역면)」,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2. 경제기반의 약화

- 대구의 비싼 지가로 인하여 대구 기업들의 구미, 경산, 포항 등 인근 경북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산됨.
- 반면, 지역간 갈등 및 정치 이슈화로 위천공단 조성이 지연되어 공장용지의 적기공급에 실패
- IMF를 겪으면서 쌍용자동차 및 삼성상용차의 부도, 섬유, 건설 등 대구의 주력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

3. 산업 구조조정지의 지연

- 지역의 주력업종인 섬유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패함으로써 95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99년도에 밀라노프로젝트 착수(밀라노프로젝트는 '9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야 했음).
- 기존 산업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IT, BT, NT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

4. 지역의 통합적 리더십의 부재

- 지역의 역량을 모두 결집하여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통합적 리더십의 부재로 지역 에너지를 결집하는데 실패함.
- 그 결과 대구·경북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협력 부재, 대구시와 경제계의 불화, 경제계간의 불협화음, 대구시와 지역대학 및 대학간의 협력 부족현상이 발생

5.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이한 대처

- 대구경제가 70~80년대 섬유산업의 전성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책임 있는 기업인, 관료, 정치인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이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였음.

- 한편 위기에 대한 대처법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대처보다는 오랫동안 집권지역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였음.

6. 변화와 외부에 배타적인 보수성

- 지역민의 성향이 유훈의 영향으로 강한 보수성을 띄어 변화에 매우 저항적이어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
- 지역민의 배타적 성격으로 외부인이 대구에서 기업 활동을 하거나 외지기업의 진출이 어려워 외부층격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 및 기업유치에 의한 경제활성화가 어려웠음.

IV. 대구의 역동성 회복 방안 : 방향과 전략

▷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답은 있으며, 문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결집이 중요함. 경제의 침체는 단순히 경제만의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1. 영남권의 중추관리 기능의 지속적 확대

- 지리적으로 대구는 영남, 국토의 동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대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행정, 교육, 문화, 레포츠, 컨벤션, 물류,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영남권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국제공항에 국제노선이 많이 생겨 하늘길이 열려야 하고, 항만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함.

SEMINAR

- 그리고 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 중추관리기능들을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이것이 「낙동강프로젝트」임. 「낙동강프로젝트」는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식수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대구지역 공단 조성 반대, 향후 발생할 낙동강유역의 물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수량이 풍부한 한강수계의 홍수 때 흘러버리는 물을 도수로를 통해 낙동강 상류지역에 건설한 댐에 저장하여 낙동강의 유지수를 확보함으로써 수질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낙동강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인 수변 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임.
- 이 프로젝트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용의 반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비용조차도 낙동강 수계 1,000만 주민들의 생존과 결부시켜 보면 결코 큰 비용이 아님.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여러 지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임.

2.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대구정신의 계승·발전

- 우리 대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지역임. 대표적인 것이 서상돈 선생의 국채보상운동, 이상화 시인의 저항적 문학운동, 2·28학생의거임.
- 이러한 대구정신은 민족문화의 원류가 대구지역에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우리 대구에서는 민족문화사에 있어 민족 정신문화를 정립한 3분의 위대한 선각자가 600년 간격으로 나타났음. 첫째 분이 원효스님이고, 둘째 분이 일연스님이며, 셋째 분이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선생임. 원효스

님은 경산 자인 사람이고, 일연스님은 경산 사람이며 최제우선생은 경주 사람임.

- 지금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나라는 어지러우며 우리 대구도 혼란속에 있음. 이럴 때 대구정신을 발현하는, 민족정신을 고양한 대구정신 원류를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사적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향토사를 정리해서 자라는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여 민족정신과 향토애, 조국애와 애국심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함.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

- 두터운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전통주력산업인 섬유산업과 기계·금속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초과학기술이 응용과학기술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을 매치시켜주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연구소를 지원하고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기업과 매치시켜 주는 데에 주력해야 함.
- 이외에 5T산업 그 중에서 분야별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미래산업을 발빠르게 육성해나가야 함. 현재 모든 지역이 첨단산업의 육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대구 지역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은 없음.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음.
-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육성, 대학과 사람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임.

4. 지방회의 완성

- 한국현대사에서 50년대 10년은 nation building의



시기였고, 60년대 10년은 경제 개발의 방아쇠를 당긴 10년이었으며, 70년대 10년은 경제 대도약기였음. 80년대 10년은 민주화의 10년이었고, 90년대 10년은 지방화를 시작하는 10년이었으며, 이제 2000년대 10년은 지방화를 완성시켜야 하는 10년임.

- 국가의 관리방식으로 볼 때 90년대 이전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관리하였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지방분권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
- 지방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결정권을 지방에, 재원을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가 그것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스스로 모아가는 것임. 지방 스스로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한마디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정책수행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함.

5. 발상의 대전환

-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음.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는 산업화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전부 뒤집어 놓고, 거꾸로 보고, 세워서 보고, 눕혀서 보고, 곱씹어 보고 이런 발상의 대전환 노력을 하여야 함.

6. 자원봉사의 활성화

- 과거에는 제1섹터인 기업과 제3섹터인 정부가 국가 및 사회의 관리를 관리하였지만 최근 제3섹터의 비

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으며 제3섹터가 자원봉사임. 행정의 수비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원의 제한으로 이를 직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특히 월드컵경기 개최나 대형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상시에는 많은 행정수요가 없으나 일시적으로 막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미국의 경우 국부 창출의 80%를 기업이 담당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4%, 나머지 6%를 NGO, 자원봉사 등 제3섹터가 담당하고 있음.
- 앞으로 대구의 역량을 모으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3섹터 특히 자원봉사 영역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V. 2003년 시정 주요시책

1.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

-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우리시 사상 처음으로 유치한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가장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어야 함.
- 경기장시설의 개·보수, 선수촌 아파트 건립, 자원봉사자 모집, 서포터즈 구성, 경축 문화행사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회진행은 물론 교통, 숙박, 위생, 안전 등 모든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임.

2. 과학기술진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SEMINAR

- 기존 해안중심 개발방안에 대응하여 내륙지역인 대전, 광주, 대구를 연결하는 Grand Triangle Techno-Belt 개념을 정립하여 달성군에 과학기술연구단지인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IT 분야 첨단산업으로 개편할 계획임.
- 또한 첨단분야 중 약령시라는 산업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하여 대구를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임.

3. 지역산업 육성시책 지속 추진

- 「대구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대구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밀라노프로젝트 마무리와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의 수립, 기계부품소재시험평가센터의 개원 등 섬유·기계 등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지속 추진
- 벤처협동화생산업단지 조성 등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며, 구지산업단지, 성서4차산업단지의 분양을 시작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도 착수할 계획임.
- PID, DIOPS, DAMEX 등 전시회의 개최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마케팅을 지원

4. 문화예술, 체육, 관광 기반의 구축

- 우선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여 개관기념으로 오페라 '목화꽃 님이시여'를 공연하고, 방짜유기박물관 건립, 불로동고분군 정비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며, 디지털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시책도 적극 추진
-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인 「대

구FC」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외국인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것음.


5.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쿄노선, 대구-인천노선 등 국내외 항공노선을 확보하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 대구권 6개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륙 및 항만 접근성을 높이며,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여 200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CNG버스 추가 보급,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도 5차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상수도 보급 확대, 노후급수관 개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음.

6. 인정스런 복지 도시, 자원봉사의 도시 건설

-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 자원봉사와 신설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1% 나눔운동도 전개

7. 혁신역량 결집을 위한 「대구포럼」 결성

- 중앙부처에 있는 인사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중앙의 정보 획득 통로를 확보
- 지역내 각 전문가 집단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협조체를 구축하여 지역 화합의 촉매 역할을 수행 

지식재산권 제도의 폐해

- 변리사로서의 작은 경험 -



안경주 | 베스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지식재산권은 영미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번역한 것으로, 인간의 지식연구 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총칭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말이 유행하다가, 이후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왔는데, 지난 1998년 특허청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개칭하면서부터 현재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모든 제도가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속에 심각한 남북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1974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특허제도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현존하는 약 350만 건의 특허 중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특허는 약 6%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5/6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개발도상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는 불과 전 세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이 외국인에게 부여한 특허의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프로세스에서 사용되지 않고 압도적 다수가 제품으로 역수입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특허제도는 오히려 국내시장을 외국인에게 독점시켜 자국의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게 하는 것이며, 선진국에 예측되어 기술식민지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을 보장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유효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매년 4월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인하는 외국 국가를 확인하여 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관찰대상국(PWL), 관찰대상국(WL)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이고 그 종류에 따라 제재를 달리하고 있다. 스페셜 301조의 단골 고객인 한국의 경우 2000년, 2001년 연속 우선관찰대상국(PWL) 지정을 받았으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WL)으로 감면되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계속 불만을 표시해 온 의약품 특허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약품시장 승인에 관한 한국 보건당국과 지식재산권 당국간의 조정 결여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지

식재산권을 무기로 한 통상압력의 방어쇠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사업 핵심전략의 하나로 시장을 독식하는 유효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보유 기술을 눈덩이처럼 굴러, 무한대로 지식재산권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강자로 시장에서 군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발기업들끼리 서로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을 맺는다면 시장 자체에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기업의 도전 자체를 원천 봉쇄시킬 수도 있다.

한국의 컬러 잉크젯 프린터 시장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HP, 엡손, 캐논, 제록스, Lexmark 등 5개 외국 선발기업은 컬러 잉크젯에 관련된 특허를 7,000여 개나 보유하고 있고 서로 라이선스를 맺어 일종의 특허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독주해 오고 있다. 신규진입을 원하는 후발 국내기업으로서 7천여 개의 특허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식재산권의 폐해는 주로 선진국 또는 해외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국내 개별기업의 방어 전략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간의 공동대응이 긴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내 기업간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지식재산권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내가 겪었던 실화를 예로 들고자 한다. 문제의 사건은 식생블록 특허를 둘러싼 국내 기업간 싸움에 관한 것이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A는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가면서 식생블록이 향후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종래부터 하천, 유수지, 도로법면, 절개지 경사면 등에는 토양이 유실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각종 블록(Block)들을 깔아 왔

는데, 최근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계 보호 및 자연 친화력을 고려하여 식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식생 내지 식재블록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7년 11월 A가 일본에서 특허 공개된 식재블록 정보 및 그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이를 모방하여, 한국 특허청에다 '식재호안블록 및 그 제조방법'을 출원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출원발명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2000년 7월 특허등록을 받게 되었다. (특히는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세계 각국의 문헌 DB 등을 통해 기술의 공지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해야 하지만, 과오로 부실권리가 등록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편, 동종 업계에 있던 B도 일본을 자주 출장 다니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식재블록 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기술이 A에 의해 특허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B가 동일한 식생 블록을 생산하면 이는 특허권 침해가 된다.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과는 다른 새로운 식생 블록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무효로 시켜야만 한다. B는 자신이 수집한 일본 특허정보와 카탈로그를 그 증거로 하여 특허를 죽이기로 하고,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A와 B는 윈윈(Win-Win) 전략을 내놓게 되었다. B씨의 무효심판으로 특허가 죽게 되면, 그 특허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기술이 되므로 식생 블록시장은 무한 경쟁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둘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즉, 특허를 죽이지는 말고 대신 두 사람이 시장을 독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공생의 밀약(?)이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권리의 일부를 주고 그 대신 무효심판을 취하여 A, B는 각각 특허 공유권리자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된 A, B는 판급수요가 대부분인 특허품에 대


해 조달청 공급량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소화해 낼 수 없는 생산물량은 하청을 주고, 하청 단가도 최대한 낮추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입찰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경쟁했던 블록시장에 특허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자, 다른 생산업체들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대로 계속해나가면 예측관계로 전략하게 되는 등 기업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조합도 속수무책이었다. A, B의 독주를 보다 못한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상담하러 왔다. 필자는 문제의 특허를 검토한 결과, 재차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충분히 무효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효심판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특허청 심사관이 동일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효심판이 당사간의 합의로 중간에 취하되자 그 사건은 특허청 관련 심사국으로 서류(부실권리 존속방지를 위한 심판사건 통보)가 넘어갔다. 특허청 심사 4국에 근무하는 L심사관은 그 사건 서류를 읽어보고 그 특허가 부실권리가 분명하며, 이 심판이 취하된 것은 아무리 당사자간의 협상이 있었다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사관의 자격으로 또다시 무효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특허법 제133조에서 심사관도 심판청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위임된 심판청구를 미루고 흥미진진하게 사건이 전개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L심사관이 부실권리를 무효시켜 주면, 우리는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취하되었던 심판이 2001년 5월 다시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특허심판원에서는 L심사관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문제의 특허에 대해 2002년 3월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막대한 독점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A와 B는 조금이라도 특허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못하도록, 무효심결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소하였다.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 특허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최대한 끌기 작전으로 특허권을 유지시키는 전략인 것이다.(그러나, 후일 무효가 확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고의 논지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행히 필자는 특허권의 폐해와 3심제도(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한계에 대한 답답함에서 벗어나 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다행 아니라, L심사관의 성실하고 전문적인 양심 때문이다. 특허법원의 판사들을 기술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 L심사관은 심지어 불복을 제조하는 공장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었고, 2차례의 준비절차 과정에서 정말 정확하고 진지하게 답변에 응해왔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한국 심사관의 심사처리권은 매우 과중한 것으로 악명 높다. 한달에 40-50건에 달하는 출원발명을 심사해야 하는 심사관으로서, 이와 같은 부가적 업무를 자진하여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 특허소송에 잘못 휘말리면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 부실 권리 하나가 회사 하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L심사관의 이번 사건 처리는 과찬이 아깝지 않다.

본고의 논지로 다시 돌아와 결론을 맺고 싶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특허제도는 자칫 기술선발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합법화시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특허제도를 폐지한다면,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인가? 안이한 모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술경쟁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하는 기업에게 특허제도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한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다. 



장 옥 현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우수인재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먼저 취임하시게 된 것을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전 회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자, 교수 그리고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분들께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들어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동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우리 중소기업이 경제활력의 원천으로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책임져야 할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부임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향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양어께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 대구·경북지역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거의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 한해도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 올해 지역중소기업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국제경기 등과 지난해말부터 불어닥친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적요인과 미-이라크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유가가 고평행진을 함에 따라 이와 같은 대외적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월중 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분기의 89에 비해 소폭하락한 84를 기록하는데 이는 지역 기업들의 향후 경기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매출전망 BSI가 기의 전분기의 93에서 88로 급락했고 생산증가율 전망BSI가 전분기의 96보다 소폭하락한 95기록. 특히 채산성전망 BSI는 전분기

의 80에서 77로 크게 하락해 고유가와 판매 부진 등에 따라 지역기업들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지역 주민들과 경제인들의 단합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의 핵심적 위치에 계시는 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청에서는 다양한 지역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 벤처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접목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산 정보화 지원사업을 지난해 보다 대폭확대 추진 (90%이상 차지하는 지역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접목이 중요)

- 특히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21C 지식 정보화시대에서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하고, 또한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 및 수출확대, 정보화촉진 등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수단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금년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동순회 상담실 운영, 취약 기업에 대한 홈닥터식자문, 현장애로기술해결·지원 등 현장 밀착 지원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지역중소기업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지원사업을 홍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청의 2003년도 주요주진 사업계획을 살펴 보면 첫째, 기술개발능력 향상과 기술혁신 촉진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품질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중 300개 정도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하여 집중육성하고

- 기술혁신개발사업에는 130억원을 투입하여 20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사업에도 38억원을 들여 300업체에 대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고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위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기술지도 사업 자금도 6억원으로 확대하여 400여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확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 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35개 창업보육센터를 벤처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형 보육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보육센터에 대한 유형별 평가시스템 도입과 사후관리를 통한 운영비의 차등지원 등 보육센터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 동대구벤처밸리를 비롯한 포항, 구미의 3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주변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를 추진하고 계속하여 지정규모의 확대, 기반시설의



확충,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의 창업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고교생 신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에 대하여는 5백만원 상당의 개발비 지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고교생의 창업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등 창업분 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각종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지역실정과 자금수요,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순수 신용대출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반 시중 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점차 늘여나가도록 선도적인 기능을 할 생각입니다.

☞ 저희 연구원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는 순수한 취지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산·학·연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인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소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개발 분위기 확산과

- 대학과 기업의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해소 및 지역과 대학이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이 바람직하며,

-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현장애로기술지도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른

신제품개발, 공정개선, 특허·실용신안출원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소기업청의 이러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토대로 산학협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이 축적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추므로 대외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할 것임.

☞ 지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지역인재는 오히려 역외유출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즈음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이나 '판로'가 아닌 '인력부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80년대 중반이후 기피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되었고,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확대 실시(84),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의 도입(91),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도입(93) 및 단계적확대 등을 통해 인력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이공계 교육의 위축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이 국내 종업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84%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선호 경향'과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상존하여 왔습니다. 3%대의 자연실업률 상태에서 80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더라도 보다 나은 일자리 탐색을 계속할 뿐 중소기

업생산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년부터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을 향후 5개년간 집중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 청소년 비즈스쿨프로그램, 우수중소기업 탐방활동,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역외유출현상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과는 다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인재가 취업할 만한 매력적인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도 그 이유이지만 지역인재들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국가공공기관의 84%,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외국인기업의 75% 안팎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경제 행정 분야의 중앙 집중현상이 인력의 역외 유출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중소기업 인력문제가 아니라 지방균형 발전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지방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 균형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건설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기업이 많이 등장하면 인재 역외 유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에서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인재가 취업에 매력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 대담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 일시 : 2003년 2월 13일(목) 10:00~11:00

· 장소 : 청장실

연구원 소식



제153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1월 20일(월)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대구발전의 역동성 회복 :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53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혜영 대구광역시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28차 이토회 개최

지난 2월 8일(토) 오후 3시 앞산 심신수련장에서 제 128차 이토회를 가졌다.

사무국 소식



조정일 본원 연구원은 2월 22일 영남대학교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김동영

- 여행스케치(주) 대표이사
- 생년월일 : 1963. 12. 20
- 주소 :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153-1(정언빌딩 3층)
- TEL : 053)426-6200



■ 김진태

- 서울보증보험(주) 동대구대리점 대표
- 생년월일 : 1940. 8. 25
- 주소 :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금융프라자 20층)
- TEL : 053)257-5037



■ 박주홍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생년월일 : 1962. 2. 10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
- TEL : 053)580-6387



■ 이동건

- 삼화건설(주) 대표이사
- 생년월일 : 1949. 7. 20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889-5
- TEL : 053)764-0114



회원동정



■ 신일희(본원 고문)

신일희 본원 고문(계명대학교 총장)은 2월 24일 성서캠퍼스 아담스 채플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음악예배 개최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2월 21일 영남대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대 야마시마사치미(山西正道) 부총장과 학생·교직원 교류 및 학술·교육에 관한 교류협정서 체결



■ 최용호(본원 상임고문)

최용호 본원 상임고문(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1월 1일 지역경제연구회의 제11회 연두산행

• 2월 (주)푸드웰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2003년 경제전망과 기업경영' 특강

• 8일 중소기업학회 회장단 회의, 중소기업 중앙회 신년교례회 참석
• 21일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메트로 팔레스 109동 1009호로 이사(전화: 053-752-2266)

• 23일 영덕군·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에서 '영덕군 경제의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

• 24일 국토연구원의 2002년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지역경제분야의 커멘트

• 3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자문교수회의



■ 오순택(본원 이사장)

오순택 본원 이사장(동일산업(주) 대표이사, 동일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2월 22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학술연구비(1천400만원) 및 장학금(1천950만원) 전달식을 가짐



■ 최만기(본원 원장)

최만기 본원 원장(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은 3월 1일 경영대학장으로 취임(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성서캠퍼스로 이전 / 경영대학 교학과 : 053)580-6361~3, 경영대학 FAX : 053)580-6364)



■ 구정모(본원 부이사장)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는 대구동구청이 주관한 '북한 동포 돕기 생필품 보내기 운동'에 동참, 1월 27일 의류 치약 침구류 등 생필품 2천여점을 전달



■ 권세혁

권세혁 코리아능력개발원장은 2월 19일 영암군민회관에서 군청 공무원과 가족, 지역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술」에 관해 특강



■ 김규창

김규창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월 4일 의성군의 주부대학(100여 명)에서 '지역경제와 복지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



■ 김상무

김상무 (사)한국관광협회(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은 2월 14일 한국관광대학에서 '관광개발정책의 진단'을 주제로 제53차 학술논문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김석진

김석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국 국립공립대학교 교수(협회)회 사무총장으로 선임(2003. 2 ~ 2004. 2)

• "분리공모를 통한 구조조정의 성과", 재무관리연구 19-2 (2002. 12), 253-270, 한국

재무관리학회



■ 김영문

김영문 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월 4일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제2대 단장으로 선임



■ 김재근

김재근 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교수는 1월 4일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대구·경북 교수선교회 주최로 개최된 '신앙과 학문'이란 주제의 제13회 동계세미나에 참석, 기도 인도 순서를 맡았으며 동 선교회의 사무간사에 위임



회원동정

- 23일 대구가톨릭대학교 과학관에서 동대학 식품산업과학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경북지역 주요 농산물의 고품질화 방안' 이란 주제의 2003년도 심포지엄에 참석

- 2월 14일~15일, 경상대학교 남명학관에서 한국식품안전성 연구회와 한국HACCP연구회와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수산식품의 HACCP syste 적용전략 workshop」에 참가



■ 박영해

박영해 영남이공대학 산학협력처장은 2003학년도 정보통신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학 40개교(IT/비IT학과), 전문대학 15개교, 실업고 10개교 선정, 약 120억 규모의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의 평가를 담당하게 됨



■ 서정렬

서정렬 정우경영컨설팅그룹(주)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2년 우수컨설팅사로 선정

- 한국컨설팅트럼협회로부터 2002년 우수컨설팅사로 선정

- 2003년 중소기업청(일반), 정부통신부(IT업체), 환경부(재활용업체)로부터 중소기업지원 컨설팅업체로 선정



■ 안충영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2월 6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독일 세계경제연구소 베아트리체 박사를 초청, 전문가세미나 개최



■ 이영수

이영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월 25일부로 경제통상학부장으로 취임



■ 이인중

이인중 화성산업(주) 동아백화점 회장은 1월 27일 소년소녀가장과 홀몸노인을 돕기 위해 20kg 쌀 50포를 대구 중구청장에게 전달



■ 이화락

이화락 한국기원 대구시 바둑협회 회장은 2월 8일 대구시 바둑협회 하한석 바둑도장에 서 제4기 여류명인전 개최



■ 정훈

정훈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월 18일 엘디스리조트호텔 7층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 개최



■ 조봉진

조봉진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은 1988년 동 사업단을 설립, 4년 7개월의 보직임기를 마치고 연구실로 귀환. 대구·경북 벤처창업보육센터협의회 회장직도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한국창업보육협회(KOBA) 수석부회장직만 수행

- 3월 8일부터 (사)한국마케팅학회 회장에 취임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2월 15일 2002년 우수(중소기업청 공장혁신분야)컨설팅사로 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과 함께 제조물책임(PLI)컨설팅(중소기업청지원 50%) 실시

- 해외 유명 규격인증획득지원 실시(ISO 14000, QS 9000, TS 16949)



■ 최달곤

최달곤 영진전문대학장은 2월 14일 이 대학교수회관에서 필리핀 팜팡가 농업대 등 국립대학 교수 22명이 참석한 2차 IT연수 개강식을 가짐



■ 황대현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2003년 2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민선 3기 제6차 공동 회장단 회의 참석

- 11일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단 정기총회에 참석



【 신착도서목록 】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광역시 지방재정 발행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구미지역 산업발전 비전과 활성화 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산업의 대응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大邱·慶北地域 機械産業의 發展方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인터넷 새마을 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경북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전략",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의 생태관광자원 개발방향",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디지털농업 시대의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환동해권의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광역시 주차문제 개선방향",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경상북도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 소수력발전 적용 검토",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의 인터넷GIS 구축현황과 향후과제",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 도시재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년 하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2002. 12
- 삼균학회, "三均主義研究論集", 2003. 2. 1
- 삼성경제연구소, "어메니티(Amenity)가 도시경쟁력이다", 2003. 1. 22
-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강국의 취약성과 대응과제", 2003. 2. 5
- 삼성경제연구소,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2003. 2. 12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2. 12
- 한국금융연구원,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2002. 12

- 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의 분석패널, "韓國經濟의 分析", 2002. 12
-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과 전략적 활용", 2003. 1. 8
- 한국산업기술재단, "산·학·연 협동 강화와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2003. 1. 21

정기간행물

- (주)푸드웰, "가살", 2003. 1. 2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3. 1. 2
- 경북테크노파크, "KTP헤드라인", 2003.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개발연구", 2002. 12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2. 11/12
- 대구광역시, "대구경제", 2002. 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2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 경제동향", 2002. 12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상의", 2003. 1. 2
- 대구은행, "대은경제리뷰", 2002. 11. 12
- 대구테크노파크, "테크노폴리스", 2002년 겨울호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포럼", 2003. 1/2
- 부산발전연구원, "녹색부산21", 2002. 겨울호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2.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1", 2003. 1.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2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Focus", 2003. 1
- 인간개발연구원,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03. 2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 2003. 1
- 좋은 이웃집, "경제중월", 2003. 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나라", 2003. 2
-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타임즈", 2003. 2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1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03. 1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2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1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2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2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2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2
- 한국수출입은행, "수는 해외경제", 2003. 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과 인력개발", 2002. 12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오순택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 원장 : 최만기 계명대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04-304943-001
- 예금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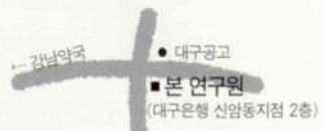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2월호 (통권 142호)

- 간 별 : 월간
- 등록번호 : 대구라01089
- 등록일 : 1998년 6월 2일
- 발행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행일 : 2003년 2월 28일
- 발행인 : 최만기 (원장, 계명대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애드벨라 대표이사)
박종달 (한국창업보육센터협회 사무국장)
박진향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애드메이저(053-751-5005)



울산대학교 산학경영기술연구원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kornet.net

“고객행복금융서비스의 지름길!! 우리주택할부금융이 **우리캐피탈**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고객의 든든한 금융파트너 우리캐피탈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우리캐피탈은 간편하고 빠른 대출서비스, 더욱 새롭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고객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입니다.



우리캐피탈 영업안내!

할부금융

- 주택자금 할부금융 / 경락자금 할부금융 / 일반 할부금융

신용대출

- 카드굿바이론(무보증신용대출) : 최고 1,500만원이내
- 학자금 대출(학기당 700만원) : 최고 2,500만원이내
- 전문직 신용대출 : 최고 1억원이내
- 개인택시 우대대출 : 최고 3천만원이내
- 우리일수대출 : 최고 1천만원이내

기 타

- 일반담보 대출 / 할인어음 / 팩토링 금융

장 점

- 대출이 신속하며 예금 거래 실적 등의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 구비서류가 간단하여 이용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 대출신청 즉시 당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영 업 부 053)426-7700
영업2부 053)425-1982

부산지점 051)631-0561
포항지점 054)272-2111
서울지점 02)538-6644

우리주택할부금융의 새이름 —
우리캐피탈
www.wooricap.com

본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361-1
TEL : 053) 426 - 7700 (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기관입니다.